

주 2회 변론·쟁점 정리… 헌재,尹 탄핵심판 속도전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총 5차례 변론기일 지정 국회측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 확보' 요청해 수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본격적인 절차인 정식 변론 기일이 오는 14일부터 시작된다. 헌법재판소(헌재)는 지난 3일 헌재 소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오는 14일부터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2차 변론기일은 2일 뒤인 16일로 지정했다. 이후 21일, 23일, 다음달 4일 까지 총 5차례의 변론기일을 미리 잡았다.

헌재가 미리 기일을 지정한 것은 국회와 윤대통령 양측에게 탄핵심판 변론에 대비할 것을 주문하는 것으로 이후 탄핵 심판 절차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은 반발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할 심리를 저해하고 있다"면서 "헌재의 일괄 기일 지정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헌재가 재판장은 여러 공판기일을 일괄해 지정할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점을 무시했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규칙 제124조의2 조항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윤 변호사는 이어 "신속한 심리만을 앞세워 변론준비절차를 중요하고 변론기일을 일괄 지

정하는 과정에서 피청구인과 대리인의 의견을 듣지 않는 건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윤 대통령측의 반발에도 헌재는 지난 3일 국회측과 윤 대통령 측이 제시한 탄핵심판 쟁점을 정리했다. 향후 정식변론 과정에서 다음 쟁점이 정리됨에 따라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적으로 오르게 될 것이다.

수명(受命)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다루어할 양측의 쟁점을 조정하고 마무리 지었다.

이 재판관은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통해 소추 사유에 대한 청구인 측 정리는 어느 정도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인 측이 인증등본송부촉탁신청을 한 수사 기록과 선거관리위원회 CCTV 영상을 제외한 대부분 증거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핵심 증거 채택도 완료 됐다. 재판부는 이날 언론 보도·영상 일부와 국회 회의록, 헌재 결정문 등을 증거로 채택했다. 국방부와 검찰, 경찰 등 수사 기록에 대한 국회 측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도 채택됐다.

국회측이 헌재에 '12·3 비상계엄 수사기록 확보'를 요청했고 헌재가 이를 수용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전 제출한 탄핵심판에 대한 답변서에서 "국회의 탄핵소추안 기결 자체가 위법"이라고 맞섰다.



정형식, 이미선 헌법재판관 주재로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회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어 "비상계엄 선포자체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윤 대통령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에 대해서도 "탄핵의결 정속수가 맞지 않다"는 주장도 내놨다. 한편 이호선 국민대 법대 학장은 "헌재가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사전 지정함에 따라 국민이 갖는 '헌

법재판에서의 공정성 구비 요구권'을 침해당했다"면서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에 무효 확인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적반하장' 尹 변호인단

"통치 행위 심사 대상 아냐...계엄으로 피해 없어" 헌재에 답변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40쪽 분량의 답변서를 통해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언급하며 탄핵심판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이 인용한 것으로 알려진 판례는 지난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관련 판결이다.

당시 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인 행위는 형사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며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상 중독적이면서 전속적인 권한 내에서 이뤄진 경우 의회는 권력분립의 구조적 문제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규제할 수 없으며, 법원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 판결을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 역시 '헌법 수호자'로서 헌법 77조에 따라 국가권급권을 행사한 것이고 비상 상황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 행위'인 통치 행위로 사법부가 이를 심사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읽힌다.

통치 행위를 이유로 형사재판, 탄핵심판 등을 할

수 없는 지에 관해서는 법조계의 견해가 엇갈린다. 윤 대통령 측은 또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한 바 계엄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 신체 등 기본권의 제한도 없었다"며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돼 보호이익이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국민이 기본권 침해를 입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대통령을 파면할 필요도 없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 측은 이어 "박정희 대통령의 베트남 파병, 노무현 대통령의 이라크 파병 등은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지만 (헌재가) 이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고 심판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헌재 구성도 문제 삼았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한 것도 무효라는 취지다.

이 밖에 국회가 탄핵소추권을 남용했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격한 증거 채택이 이뤄져야 하며, 수사 기록을 헌재가 확보해선 안 되고, 국회의 소추의결서를 사후적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등의 주장도 펼쳤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당, 빠르면 내일 '내란·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尹 체포영장 재집행 촉구... '집행 저지' 경호처 해체 방안 검토도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7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모두 부결시키겠다는 방침이어서 여야 대치도 우려되고 예상된다.

민주당은 오는 7일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 재표결에서 가결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이 위헌·위법적이라며 재표결에서 반드시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무엇보다 특검이 가동되면 여권 인사들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전개돼 진영이 초토화되고, 조기 대선에서 힘 한번 못 써보고 정권을 내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쌍특검법 재표결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법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할 경우 8표가 부족한 만큼, 이번에도 국민의힘 이탈표 규모가 관건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탈표를 최소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직전 쌍특검법 표결 결과를 고려하면 부결을 장담할 수만

은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12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 특검법에 5명, 김 여사 특검법에 4명이 찬성투표했다. 이를 뒤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선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이탈표 규모와 맞물려 쌍특검법 재표결의 가부를 가를 또 다른 변수는 여야 일각에서 거론되는 '수정안'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쌍특검법에 부결을 고집하되 특검 후보추천 등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수사 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할 수정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에서도 김 여사 특검법의 경우 여권 인사들이 가장 거부감을 보이는 '명태군 의혹'을 분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정안을 마련해 국민의힘이

타표를 극대화하는 현실론이 나온다.

여야는 쌍특검법과 별개로 오는 6일이 유효 시한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와 법원이 월권을 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법원이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영장에 적시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여당은 공수처와 야당 규탄 장외집회 카드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조속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경호처를 '내란 사병'으로 규정하고 해체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73 광주일보 73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문에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문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충북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